

이슈브리프 884호
(2026. 8.19)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제884호

유현정 yhj@inss.re.kr



국문초록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북중관계 복원 이후 한반도 전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세한 조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왕이 부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정치적 해결', '건설적 역할'을 어떠한 수준으로 구체화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 중일 갈등 속 한국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 청년·인문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 서해 구조물·한한령 등 미해결 현안의 진전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중관계 복원으로 확대된 중국의 대북 소통능력을 한반도 위기관리와 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 중국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국이 강조해 온 '정치적 해결'과 우리 정부의 평화구상을 연계함으로써 한중 간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견지하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이를 핵 동결·감축과 대화 재개로 연결하는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과학기술·공급망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학술·문화·관광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중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서해 문제와 한한령 등 갈등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상급·장관급·차관급·국장급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략 소통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방한을 향후 이어질 주요 정상외교와 연계하여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왕이 방한, 한중관계, 북중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왕이 부장은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교류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후 약 7개월간 급변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의 복원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 중국은 한중관계보다 북한·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이 부장의 방북(4월)에 이어 시진핑 주석(6월)과 왕후닝 전국정협 주석(7월)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한중 간 고위급 교류에 앞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복원되었다. 같은 기간 중러 정상회담(5월)과 최섉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7월)도 이루어졌다. 아직 북·중·러 3자 협력으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각각의 양자관계가 빠르게 밀착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진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역내 질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배경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번 방한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의제와 핵심 관전 포인트

이번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후속협상, 첨단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분야와 △문화·관광, 청년·학술교류 등 문화·인적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양국의 핵심 관심사와 직결된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중관계 강화에 주력하면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던 한반도 문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 수행 의지가 어느 정도 강도로 표명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방한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지 여부 자체보다 왕이 부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건설적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강조하고 구체화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왕이 부장이 한국에서 정치적 해결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다면, 이는 중국이 북중관계 강화와 별개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재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북미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북한과의 소통, 긴장 완화 또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다시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공간을 확보하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 개시에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중요하다. 정부가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4자회담 구상을 제시한 만큼,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주요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해결’ 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구상과 중국의 기존 입장 사이에는 일정한 접점이 존재한다. 이번 방한에서 중국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선언적 제안을 넘어 관련국 간 협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비핵화’ 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까지 용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나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등 역내 핵·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우려하는 역내 진영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북한의 추가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정치적 해결’ 을 강조해 온 중국의 입장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및 대화 재개 구상 사이에서 어떠한 접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이번 왕이 방한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대목이다.

둘째,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된 최우선 민감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왕이 부장의 방한이 지연된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변경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중국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6월 한국 여야 국회대표단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대만을 방문(6.8)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간섭’ 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7.22)에서 3국 장관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만큼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일관계는 역사문제와 안보문제가 중첩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이른바 ‘재무장’ 움직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장거리 타격능력과 첨단전력 확충을 추진하자 중국은 이를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 군비확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역사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중국은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인식과 군사력 강화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의 우려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왕이 부장이 이번 방한에서 역사문제를 매개로 한국과의 공통분모를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공동의 역사’를 강조해 온 흐름과도 연결된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역사를 거론하며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7월 한국이 과거 일본에 의해 반출된 청나라 시대 석사자 한 쌍을 중국에 반환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를 양국이 ‘역사를 기억하고 협력하려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따라서 왕이 부장 역시 일본의 역사인식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과의 역사적·전략적 공감대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교류를 중심으로 한 인문·문화교류 확대와 양국 간 이해결 현안의 진전 여부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인적·문화적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이번 방한에서는 특히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청년 교류 확대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생·유학생 교류를 비롯해 학술·문화예술·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피플 투 피플 (People-to-People)’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FTA 후속협상을 비롯해 첨단산업·공급망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등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현안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현안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단기간에 일괄 해결 되기는 어렵지만, 중국 측이 관계 개선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로 연결할 것 인지가 향후 한중관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왕이 부장의 방한은 ‘북중관계 복원 이후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의미를 갖는 만큼, 변화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중관계의 향후 방향을 조율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북중관계 복원이라는 새로운 전략환경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북중관계의 복원은 북한의 경제·안보적 뒷배를 강화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 직접 소통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밀착 자체를 경계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확대된 중국의 대북 소통능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억제와 대화 재개에 기여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왕이 부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북한의 최근 입장과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방한을 북중관계 복원으로 확대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한반도 위기관리와 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도 북한을 의식해 비핵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북핵중단 전략에 호응할 여지는 있다. 북핵 상황 악화는 자칫 콜비 차관이 제기한 저위력 전술핵 재배치, 일본의 비핵 3원칙 폐기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중국의 공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번 방한에서 중국의 호응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선언적 제안에서 관련국 간 실질적인 협의가 가동되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북핵 능력의 추가적인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동결 및 감축논의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 한중 간 협력 의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략적 갈등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층적 전략소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 양국 사이에는 경제·과학기술·기후·디지털·식량안보·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협력의제와 함께 서해 문제와 한한령 등 잠재적 갈등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특히 청년·학술·문화·관광 등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정부 간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과 갈등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소통채널의 확대와 제도화가 중요하다. 현재 안보실장 간 채널과 차관급 2+2 대화,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 등이 가동되고 있지만, 정례화된 장관급 교류채널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정상·고위급 회담에 의존하기보다 정상급-장관급-차관급-국장급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한중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갈등이 양국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시적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이어질 미중 정상외교와 APEC·G20 정상회의 등 일련의 다자·양자 정상외교 일정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왕이 부장의 이번 방한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방한을 일회성 한중 고위급 교류에 그치게 하지 않고 중국의 대북 소통능력과 ‘정치적 해결’ 의지를 한반도 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연결하는 한편, 향후 주요 정상외교

계기를 통해 관련국 간 협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중 관계 복원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교차하는 현재의 유동적 정세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기회로 전환하고, 향후 이어지는 정상외교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